

# 광주 송산물빛 유아숲체험원 안전관리 '허술'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2018년 개장...매년 민간위탁 운영  
목재 놀이기구 부식·뒤틀림 등 심각한  
문제 인식 후 조치도 임시방편 '빈축'



광주 광산구 소재 송산물빛 유아숲체험원 내 '원목 오르내리기' 시설물(왼쪽)이 기초 부위가 부식된 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나 나일론 소재 끈과 안내문만 부착돼 유아들의 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네는 위탁자가 임의 설치한 미승인 시설물인 데다, 낙상을 대비한 안전장치가 없어 부모들의 걱정을 사고 있다.



/이육근기자

산림청이 유아들의 정서 발달과 자연 체험을 돕기 위해 광주 지역에 조성한 '송산물빛 유아숲 체험원'이 위탁 업체의 관리 부실로 이용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지평동 산 27 일원에 약 1.6ha 규모로 송산물빛 유아숲체험원을 지난 2018년 조성했다.

조성 후에는 매년 공개 입찰을 거쳐 민간 운영자를 모집해 오고 있으며, 연간 약 1만명의 이용객이 방문할 정도로 지역 내 대표적인 유아 전용 산림 교육 시설로서 입지를 다져왔다.

민간 운영자가 진행하는 핵심 프로그램은 숲 체험이다. 매년 공모 때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씩 달랐지만, 지도사 등 교육 인력을 통해 유아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게 골자다.

운영은 동·하절기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연중 9개월간 이뤄지며 시설 자체는 상시 개방이라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위탁 규정상 운영자는 내부 시설물

의 관리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매년 정기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 이행 계획서 평가를 통해 미흡 사항은 즉각적인 개선 대책을 세우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장의 실태는 아슬아슬하기 짝이 없어 매년 이뤄진다는 안전점검의 실효성에 의문을 들게 했다.

실제 최근 찾은 체험원 내부의 '원목 오르내리기' 시설물은 지면과 맞닿아 있는 기초 부위가 부식된 상태였다. 또 시설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많은 유아들이 한 번에 올라가면 하중을 이기지 못해 통째로 무너지거나 뒤집힐 우려가 커 보였다.

더 큰 문제는 붕괴 위험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허술한 안전 통제 방식이다.

지난 2월 분보 취재진이 위험성을 집의한 때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났지만, 이뤄진 조치라곤 얇은 나일론 소재 끈을 시설물에 둘러두며 '안전이 우려돼 사용을 금지합니다', '철거 예정'이라는 안내문을 붙인 것뿐이었다.

호기심 많고 돌발 행동이 잦은 유아들이 언제든 통제선을 넘어 접근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외에도 체험원 내부에 설치된 그네의 경우 위탁 운영자가 임의로 설치한 미승인 시설물로 드러났다. 게다가 해당 시설물 주변에는 아이들이 떨어졌을 때 충격을 줄여줄 잔디나 매트 등 안전 장치가 없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체험원 위탁운영 업체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아이들 눈높이에서 관찰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리 주체인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정기 점검상에서는 안전에 대한 특이점을 찾을 수 없었지만, 혹시 모르는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해명했다. /이육근기자

## 전 연인 성폭행 대학교수 2심도 '실형'

법원, 항소 기각...원심 '징역 4년' 판결

전남 지역 한 대학에 교수 재직 당시 헤어진 연인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절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50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2-6월 과거 연인이었던 B씨의 집을 6회에 걸쳐 무단 침입하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의 집은 아파트 고층이었는데, A씨는 침입을 위해 건물 외부 난간을 타고 창문을 뜯어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우리 때는 낭만이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사정을 고려해도 A씨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의 선고를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안재영기자

## '수의계약 특혜' 구북구 화순군수 검찰행

뇌물을 받고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는 구북구 화순군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관리행위사범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 군수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함께 검찰에 넘겨진 이들은 화순군 전·현직 공무원 4명, 여성기업 법인 대표 실제 운영자, 하도급 업체 관계자, 브로커 등이다.

구 군수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의계약 공사 9건을 여성기업 1곳이 수주할 수 있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안재영기자·화순=이병철기자



6·25기념일... '주먹밥 체험' 6·25전쟁 제76주년인 25일 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에서 전쟁 당시 군인들이 전투식량으로 먹었던 주먹밥을 원생들이 직접 만들어 맛보고 있다. 어린이집은 원생들에게 역사적 의미를 심어주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광주 북구 제공>

## '테러단체 지원' 우즈벡 불체자 재판대에

돈 보내준 동생 UN 지정 'KTJ' 소속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UN이 지정한 국제 테러단체에 몸담은 동생에게 자금 등을 지원해 재판대에 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공중등협박목적및대량살상무기확산을방지하기위한자금조달행위금지관련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

법체류자 A(30대)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테러단체 'KTJ'의 조직원인 친동생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하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5대를 수출용 중고차로 위장해서 보내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4년 체류 기간이 끝났지만,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머물며 당국의 단속 때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내민 혐의도 받는다.

이날 A씨는 동생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보낸 것이고 SUV의 경우 주문대로만 보내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시리아에서 생활하는 동생이 KTJ 조직원인 것은 현지의 우즈베키스탄인에게 가해지는 폭력 사태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오는 8월13일 재판을 속행, 피고인 신분 등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시리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KTJ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로 알려져 있으며 2016년 주(駐)키르기스스탄 중국 대사관 자살폭탄테러, 2017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탄테러 등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다. /안재영기자

## 노동자 폭행·감금 염전업주 등 구속 송치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감금한 염전 업주와 중사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폭행과 감금 등 혐의를 받는 A(60대)씨 등 3명을 최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영광 소재 염전 업주이며 나머지 둘은 이곳의 종사자다. 이들은 염전 소속 노동자 3명을 상대로 1차례 이상 폭행하고 자유롭게 이동

하지 못하도록 통제해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3명은 50-60대로,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3년 이상 A씨 소유 염전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날 피해자 중 한 명이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범죄 피해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한편 경찰 수사와 별도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염전 측에서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안재영기자

2026

# 손자녀 가족돌보미 사업

광주여성단체협의회